

서울 도시재생 ‘사업비 없어’ 난항... “국유지 활용을”

시·국유지 사용중이거나 제약 많아 국·공유지 관리→활용중심 변화

용도폐지 신고제로 일반재산 늘려 매각 진행 등 자유롭게 활용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격인 ‘앵커시설’ 조성사업이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38만5718㎡,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7601.5㎡의 국유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거점시설 등이 포함된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은 시유지·국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이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규모·입지 등 여건에 따른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민간부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공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또 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 이용 실태〉

구분	공공시설	개인주택	도로	나대지·공원 및 기타
현황 사진				
				

자료=서울연구원

시재생 관련 사업구역 내 시·국유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활용되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유지는 관리 위주에서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78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간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독도정수장 등 국유지 86필지와 구로경찰서·치안센터 등 토지·건물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북한산국립공원 등 서울시 공유재산 164필지, 15동이 포함됐

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라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처분) 활용 범위 확대 ▲국유지 활용 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 ▲용도폐지 신고제 도입 ▲총괄사업시행자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연구원은 행정재산이 전체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

므로 도시재생사업에 한해서는 행정재산을 처분·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도시재생사업에서 국유지 활용 시 이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하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이 짧아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도폐지 신고제를 도입해 일반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개발과 매

각을 진행할 수 있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기재부 장관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나 도시재생사업주체가 사업 구역 내 유류 행정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재산을 파악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 신속하고 적극적인 용도폐지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난개발이나 민간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연구원은 민간이 직접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방법 대신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민관이 복합된 주체를 형성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 시 난개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총괄사업시행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괄사업시행자는 공공지분이 과반을 차지하는 공공주도의 민관협력주체다. 연구원은 공공지분을 높여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 등 민간시장 과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유류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국·공유지의 원활한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 구조 헬기가 산악사고자를 구조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동물구조 줄고 교통사고 구조 늘었다

소방재난본부, 119출동 거부 성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단순한 잠금장치 개방이나 간단한 동물구조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출동기준을 변경한 결과 동물관련 구조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교통사고 구조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기도 구조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총 20만1,697회 출동, 15만46건을 구조 처리했

으며 이를 통해 2만1,599명을 구조했다. 2017년 대비 도내 구조출동은 1만176회(5.3%), 구조건수 767건(0.5%) 증가했고, 구조인원은 890명(3.9%)이 감소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발집제거 건수는 3만5,577건에서 3만4,208건으로 3.8%, 동물포획은 3만3,331건에서 1만5,488건으로 53.5%, 잠금장치개방은 1만2,894건에서 1만1,813건으로 8.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구조건수는 1만5,441건에서 1만8,416건으로 19.3% 늘었다. /경기=김승열기자 kimsy@

‘3·1운동 100년’ 세종대로서 만세행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서울광장서 ‘꽃을 기립시다’ 전시 안국역에 기미독립선언 ‘100년계단’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종대로서 100년 전 만세 행진을 재현한다. 3·1운동 발상지인 삼일대로 일대는 역사적 상징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공감(3·1운동 100주년 시민 공감대 확산) ▲기억(기념공간 조성·활용) ▲성찰(우리역사 바로알기)을 핵심 키워드로 총 30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3·1절 당일에는 서울광장~세종대로~광화문 일대에서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00년 전 민족이 하나 돼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날의 합성을 다시 한 번 재현하며 세종대로 일대

를 행진한다. 서울광장에서는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짚어볼 수 있는 ‘꽃을 기립시다’ 전시가 열린다.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대화관 터’와 3·1운동 발상지인 ‘삼일대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대화관 터는 ‘3·1독립선언광장’으로 만들어진다. 3월 착공해 8·15 광복절에 맞춰 개장할 계획이다.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에는 독립선언문 배부터(쉼터, 녹지), 천도교 중앙대교당(정원, 포토존) 등을 중심으로 5개의 시민 공간이 조성된다.

지하철 안국역에는 기미독립선언서가 새겨진 ‘100년 계단’이 만들어진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의 한국 거주지 ‘딜쿠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하고 있다. 3월 1일 오후 2

시 시민공개행사를 가진다.

시는 시민들이 근현대사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 역사강좌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전시회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진행된다. 석호필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3·1운동 정신과 제암리 학살 참상을 세계에 알린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를 포함한 캐나다인 5명을 조명하는 기념 전시회는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열린다.

일제강점기 광복군과 임시정부 요원들이 환국할 때 탑승했던 C-47기 수송기를 활용한 교육·전시 프로그램(여의도공원 내),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픔을 되새기는 ‘군함도-군간지마 전시회’(9월), 일제강점기 복음을 지킨 정세권 선생 기념 전시회(4~5월) 등이 연중 개최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 5곳에 7월 ‘돌봄SOS센터’ 첫선

긴급 가사·간병 등 맞춤형 서비스 2021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긴급돌봄, 일상 편의 등을 지원하는 ‘돌봄SOS센터’가 7월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1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창구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할 때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등 일상적 돌봄까지 주민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

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된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보건소나 치매센터, 복지관 등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뤄진다.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로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지 파악한다. 이후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돌봄매니저가 만족도 조사, 사후점검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한다.

시는 자격이 맞지 않아 기존 제도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연간 최대 5일까지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10명 선발

경기도가 도민들의 먹거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올 상반기 총 110명의 명예감시원을 선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음식점과 전문판매점 등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6500만 원

으로 도가 30%, 시 군이 70%를 부담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명예감시원은 농수산물 생산유통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명예감시원은 도내 신규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을 위주로 1일 6~10곳을 방문, 원산지 표시 제도 및 위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감시원에게는 1일 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경기=김승열 기자